

공정 임대료·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추경론 '고개'

코로나 재확산에 자영업 피해 가중... 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책 목소리 이동주 의원 '세금 멈춤법' 추가 발의... 민주당 "내년 예산 조기 집행"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경이 성사된다면, 코로나19 관련으로는 다섯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 임대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만 의원은 "캐나다는 75%를 감면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등 입차인 지원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펼쳐나가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장이 각국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설명했는데, 일본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세금 멈춤법'을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금액의 50~7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임대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이

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3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부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은)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추경 편성론이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태년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면서도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2월에 통과된 558조원의 예산이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적시에, 적소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직접일자리 예산도 30.5조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1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 나온다

4명 대상 최종 표결 ... 국민의힘 추천위원 사퇴에도 강행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결원이 생긴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지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예정된 처장 후보 선정 절차에 마찰이 예상된다.

추천위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현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 위원 중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 공수처법상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기까지 10일 기간을 준다는 부분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검사 출신 한명만·최준식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하면 된다"면서 "허수아비 한 명만 올리고 둘러러 세우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일(18일) 의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후보 선정을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야당이 내세우는 법 조항은 추천위가 처음 구성될 때와 관련한 것"이라며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5명에 문제가 없다면 1~2명이 빠져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치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법리적으로는 위원 1명이 없어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18일 회의에서는 앞서 다수 득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각각 5표), 이강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각각 4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순천 출신 소병철, 차기 법무장관 되나

문 대통령 이달말 교체 가능성...이용구 차관과 함께 물망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연내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 장관은 내년 1월까지의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62·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순천에서 태어난 소 의원이 낙점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첫 검



사 출신 법무장관이 된다.

법무장관 인선은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인선과 맞물렸다는 말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이르면 18일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수처장을 동시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교체를 계기로, 사실상 예고된 소폭 추가 개각을 연내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2차 개각은 내년 4월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청와대 비서실 인사와 연동돼 있다.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교체'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

4개 여론기관 합동조사 21%...이낙연 18%·윤석열 15%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6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할까'라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를 꼽은 답변이 전체 응답의 21%로 가장 많았다.

이낙연 대표는 18%, 윤석열 총장은 15%로 뒤를 이었다.

대선주자 상위권 3명의 인물별 호감도는 이 지사 52%, 이 대표 43%, 윤 총장 35%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3%로 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5% 순이었다. 태도 유보가 30%에 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43%로 '잘한 일' 39%보다 많았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6%, '도움이 안 될 것'은 41%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2월말 경선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 이후인 2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다. 설 이전에 경선을 치르려면 당초 기류에서 다소 늦춰진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민생·경제'에 우선 집중하지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7일 회의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재보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부산시장 후보군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서울에선 이상호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선언을 하긴 했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김해영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 출신 전현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